

전주시, 자동차 과태료 체납 강력 징수

징수팀 신설 327억원 본격 징수… 부동산·예금·급여 압류 등 처분 강화

주정차위반 5건의 과태료 고지서를 받고도 8년째 납부하지 않은 덕진구 J(43세)씨는 최근 자동차 폐지를 위해 차량등록과를 찾았다가 깜짝 놀랐다. 예전처럼 승용자동차에 대한 주정차 과태료를 1건당 4만원으로 계산하고 20만원이면 되겠지 생각했는데, 과태료가 1건당 7만800원으로 늘어나 총 35만4000원을 납부해야 했기 때문이다. 당초 생각했던 금액보다 무려 15만4000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했다.

전주시 교통안전과 체납징수팀은 "J씨처럼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우습게 보는 큰 죄 다친다며 자동차 관

련 과태료를 고지 받게 되면 빨리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08년 6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이전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 가산금이 붙지 않았지만, 이제는 자동차 과태료를 자진납부시 20%를 감경 하지만 체납이 될 경우 5%의 가산금과 1건당 7만800원으로 늘어나 총 35만4000원을 납부해야 했기 때문이다.

전주시도 지난달부터 조직개편으로 교통안전과에 체납징수팀을 신설하고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 327억원에 대해 본격적인 징수에 돌입했다.

전담 징수팀 신설로 자동차 관련 과

답하게 된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주정차 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필 등 자동차 소유자의 법적의무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관련 세입은 시민들의 부족한 주차장 조성과 교통안전시설 정비, 교통관련 시스템 개선 등 전주가 전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갖춘 도시로 발전하는데 고스란히 투자되는 선순환 재원이다. 이철수 시민교통본부장은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각종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내 자진 납부해 달라"며 "나들이가 본격화되는 봄 햇살 철 시민이 우선인 선진국형 교통질서 확립과 기초질서 지키기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재 기자

생활고 강도행각 20대 검거

직장에서 해고된 뒤 생활고를 겪던 20대가 강도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의신경찰서는 15일 흉기로 여성을 위협해 강도행각을 벌인 혐의(특수강도모수)로 최모씨(23)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1일 오후 7시30분께 의신시 한 마을 입구에서 A씨(22·여)를 뒤쫓아가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의 흉기 위협에도 A씨는 도망쳐 화를 피했다. /인천수 기자

국정원 사칭 사기 50대 구속

국가정보원 직원을 사칭해 사기행각을 벌인 50대가 구속됐다.

군산경찰서는 15일 유명 정치인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국정원 직원을 사칭해 11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조모(53)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013년

부터 최근까지 A(49)씨 등 지인 6명에게 "유명 정치인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비자금 돈세탁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총 11억원을 받아 쟁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조씨는 지인들에게 국정원 직원이 새겨진 명함을 보여주며 "북파공작원인 친구를 대신해 국정원 특수업무를 수행 중인데, 정치인의 비자금을 해외에서 세탁하면 100억원을 받기로 했다"고 속여 거액의 투자를 받아 쟁기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수법으로 지인들에게 투자금을 받아 쟁기 조씨는 복권 구입과 경마 등 유흥비로 투자금을 모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용주 기자



전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노동조합이 15일 도교육청 2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교육청은 학교 교직원 간 업무갈등을 해결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교직원 업무갈등 해결하라”

도교육청 공무원노조, 김승환 교육감에 촉구

학교 행정직원과 교사들이 업무분담에 대해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 공무원노조가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방관적 태도를 비난하고 나섰다.

전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노동조합은

15일 도교육청 2층에서 기자회견을 열며 "전북교육청은 학교 교직원간

업무갈등을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내년 신학기가 되면 학생들은 설렘으로 기득하지만 학교는 교직원 사이 업무갈등으로 반복의 징이 되고 있다"며 "이는 전북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의 무관심과 관료들의 무소신·무원칙 행정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전북교육청은 법령에 명확히 담당자가 지정된 업무조차 '교원의 업무경감'이라는 이유로 교원업무를 행정질서 떠넘기는 것을 방관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교직원간 업무갈등이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음에도 전북교육청은 노노 갈등과 공동체를 파괴하는 무원칙 행정을 일삼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영양·보건교육

분야와 교원인사관리, 학생 전출입·

학교 CCTV 관리 등 교원이 담당하도

록 명시된 업무까지도 행정직원들이

떠맡고 있다"면서 도교육청의 적극적

인 개입을 요구했다. /고민형 기자

스피치·웅변·면접·리더쉽·시낭송

◎ CEO, 2%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귀하에게 날개를 단다!

◎ 감성과 파워 스피치로 언역(言力)의 시대에 성공의 날개를 단다!

◎ 소통과 감성의 시대 필수과목을 이수해야 날개를 단다!

〈김양옥 전담교수의 전문강사지도〉

- 전주교육대학교 겸임교수 · CEO과정 담당교수
- 전북대 교양학부(토론과 면접) 겸임교수
- 한국웅변인협회 전북 회장
- 전북 최초 스피치과정 설치 강의자
- 한국스피치&리더쉽컨설팅 대표
- 스피치 리더쉽경쟁 40년 강사 및 스피치칼럼리스트
- 저서: '365일스피치커뮤니케이션', 나를 세운 말, 말
- 방송: KBS 아침마당(3회), MBC 전라도사람들
- JTBC현장다시보기등 방송출연

※과 목: ①스피치기법과 리더쉽 ②스피치최고지도사(고급)

③주말반: 토요일(매주1회수업) ④면접반

상담전화 285-6676, 231-6669, 010-7304-5665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전주, 익산캠퍼스)
서남대학교 평생교육원(남원, 순창, 장수)
군산대학교 평생교육원(군산, 김제, 부안)
우석대학교 평생교육원(전주, 완주, 김제)
전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전주, 임실, 완주)
전북과학대학교 평생교육원(정읍, 고창)

전주 한지 전통문화 맥 잇는다

18일까지 수강 신청 접수

지로 꽃만들기) ▲민화(끼치 호랑이, 모란도 채색) 등 4개 분야이며, 김해미자(전지), 최영준(지승), 석용스님(지화), 신동식(민화)씨가 각각 강사로 나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대상은 관련 분야 2년 이상 종사자 또는 종급 이상의 경력을 갖춘 사람으로, 과목당 10만 원(재료비 별도)이며, 각 분야별로 10명씩 총 4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접수기간은 오는 18일까지며, 신청은 이메일(ded@hiseo.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전통문화전당(www.ttc.or.kr) 또는 한지산업지원센터(hisc.re.kr)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센터 디자인개발실(063-281-1553)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재기자

민중총궐기 집회 주도 한상균 위원장 재판서 집회 영상 증거능력 인정될까

지난해 11월 열린 1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노총 한상균(53) 위원장 재판에서 집회 동영상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재판이 될 전망이다.

서울중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심답)는 15일 열린 한 위원장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전문기판에 집회 동영상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감정을 맡길 것인지 의견을 밝혀달라"고 변호인 측에 요구했다.

변호인 측은 17일 오전 11시에 열리는 다음 기일에 이에 대한 입장장을 밝힐 예정이다.

재판부는 "영상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집회 영상의 내용 자체가 위·변조되지 않았다는 점과 영상을 바로 그 현장에서 찍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영상 자체가 조작된 것 같다면 감정을 해야하고, 그렇지 않다면 보내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영상이 대부분 사본이라고 밝혀 향후 법정에서 영상의 원본을 활용한 이들을 불러 동일성을 입증할 계획이다.

검찰은 "상당수 영상의 원본이 있지만 상황"이라며 "하지만 영상 대부분 원본을 활용한 이들을 찾을 수 있어 활용에 대한 증언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한정된 시간에 이들을 찾으려면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용주 기자

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측정 거부 40대 집유

백씨는 이날 새벽 4시50분께 전주시 덕진구 우이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미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선변경 과정에서 앞차를 들이받아 경찰 조사를 받던 중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해 법정에 섰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이뤄져야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시각장애 1급의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백씨는 지난해 8월20일 전주덕진경찰서 역전파출소에서 3차례에 걸쳐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용주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